

“PF 위기설, 연내 정리 기대… 자본시장 파이키우기 더 노력”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2주년

“남은 임기동안 추진과제 마무리 미래금융 장기과제 준비할 것”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관련 총리·금융위원장 등과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할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는 동시에 각종 현안에 대해 답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는 ‘N월 위기설’

에 대해서는 “PF 시장의 위험 촉발요인에 대한 진단 내지는 처방이 대중적이었고 근원 질병에 대한 처방이 없었던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현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나 대체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 중이며 짧게 보면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PF 정상화가 이뤄지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고착화 문제 등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를 다뤄 볼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경·공매 방식’ 위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PF 부실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거버넌스 문제인 것이기 금융사가 망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만 경·공매를 꼭 집어 말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원래 욕심보다 느린 속도로 업권의 자발적인 정상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가 아니더라도 NPL(부실채권)을 파는 등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정확한 숫자가 반영 안 되는 현재 상황은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하면서 갑자기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나온 발언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무 구조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은행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지도 예정”이라고 답했다.

자본시장 ‘파이 키우기’와 선진화·선순환과 관련된 밸류업이 느리다는 지적

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10년이 걸렸다”며 “현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밸류업 노력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좀비기업이나 위법·위규 기업에 대한 대응은 꾸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총리, 금융위원장, 한은총재 등과 함께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거래세, 상속세 등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상속세 중 특히 기업 가계 승계 등 기업과 관련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금투세 입법 당시 충분한 고민이 반영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사이 코로나19, 가상자산 활성화, 고금리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해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정우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지불당사자 능력 고려돼야” vs “차별적용, 사회갈등 유발”

(사용자측)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

사용자측 “미만율 업종별 차이 커 구분적용, 비정상적 상황 해소해야”

근로자측 “특정업종 최저임금 적용 인력난 악화, 해당 업종 경쟁력 하락”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적용 방식 등 주요 쟁점마다 다른 입장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에 대해 각기 정반대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은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판 세상이 아니라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

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견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거들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근로자측)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측은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경영계는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기정 경총 전문은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사 결과를 놓고도 노사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소비자물가 2.7% ↑… 두달연속 3% 미만

통계청, 지난달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2%, 하반기 안정화 전망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7% 오르며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정부 목표인 3% 미만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에 체감물가 안정화를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채소 물가의 급등 여파로 2월(3.1%)과 3월(3.1%)에 3%대를 웃돌다가 4월(2.9%)에 이어 두 달째 2%대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5월 소비자물가는 2.7%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근원물가도 2.2%로 하락하면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



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연초 적용했던 원당,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 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한 원가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세종=김연서 기자 kys@

» 1면 ‘종부세·임대차2법’서 계속

전셋값 54주 상승에도 ‘임대차2법’ 진척 없어

전셋값이 5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시장이 들쭉이고 있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논의도 진척이 없다.

임대차 2법은 오는 7월 말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기존 2년인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했으며,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임대차 2법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전세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기약없이 연기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